

국힘 이준석·배현진 '정면충돌'

李 “비공개 회의 안하겠다”
裴 “회의 철저히 단속해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현안 논의 여부를 놓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20일 연출됐다.

이날 갈등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의 의장 직권으로 비공개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모두발언 없이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눠서 진행되는 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루 언론에 파용포까지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최고위의 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전차리만 하도록 하겠으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후시라도 현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공개발언 끝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진행되는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당 및 최고위원을 놓고 최고위 내 이견이 박은 유출되면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 회의를 할때 마다 참 답답했다.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이 순간의 비공개회의로 최고위원들이 속사정을 터놓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날 낚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낯뜨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회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지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을 단속하는 게 맞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최고위원회의서 현안 여부 놓고 고성 주고받아
李 “특정인 참여 시 유출 많이 돼... 목과 못해”
裴 “스스로 유출 많이 하지 않으셨냐” 항의도

좀 더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의 논의는 건강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두 사람은 최고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후시 제시된 국제위원장 임명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자 배 의원은 “비

공개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누차 제가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제안하지 않았냐”면서 “이 대표도 많이 (비공개 회의 내용) 스스로 유출하지 않으셨냐”라고 항의했다.

이 대표는 배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안에서 해야 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단속을 안해서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이야기하신 것을 언론인들이 쓴 것을 지금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비공개회의를 하느냐”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며 싸움을 말리는데 나섰지만 이 대표는 급기야 “단속해볼까요 한번, 단속해볼까요”라고 맞받아 치기까지 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이 대표는 국제위원장 의결만 마치고 3분 만에 나와 대표실로 들어갔다.

/뉴스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교육서비스 향상 학생 수 감소 해결을”

김희수 도의원, 고교 학점제 활성화 필요성 주장

김희수 전북도 의원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고교 학점제 활성화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정적 정착과 활용을 위해서는 고교 학점제가 학교 재량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학교 간 협력의 현실적 어려움 생방향 원격수업 참여자들의 적절한 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보안을 촉구했다.

그는 “고교 학점제는 수업 시간은 물론, 학교 후야 주말에도 오직 교육의 영역으로 치부했던 과학 실험, 미술수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교육 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교육이 직면한 학생인구감소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뭄 대책, 댐질 처방식 대책이 주 이뤄”

박용근 도의원 “노후 상수관 교체·지하수 관리강화 등 추진”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고 댐질 처방식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러한 가뭄 극복을 위해 물을 잘 관리하고 절약해야 하며, 노후 상수관 교체, 지하수 관리 강화, 통합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절수 시설 보급과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간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수 시설 교체나 빨래 모이끼기,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용 이용하기 등을 통해 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물 사용을 줄이면 상수도 요금 절감은 물론 반대로 하수처리 용량을 줄임으로써 처리비용과 환경 에너지 절감과 같은 2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군산 특별자치도인가?”

박용근 도의원, 성명서 통해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구성 비판

“검찰 출신 측근 대거 등용尹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전북도의회 박용근(더불어민주당, 장수) 의원이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구성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기했다.

을 샀던 인물이다”라고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또한 “최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신의 측근 인사를 대거 등용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김관영 당선자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근 의원은 “행정인 인사가 만사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 인수위를 장악하는 것은 결국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성장 정책 등 위기에 빠진 전북을 구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이다”라며, “당선인 입맛에 맞는 정책 내용은 인수위 구성이 아닌 능력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균형추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이어 “인수위원장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 최근 사임한 두재균 도정 혁신단 IT 단장 등은 모두 군산 출신이고, 이 중 일부 인물은 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라고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이용호 의원과 면담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측은 최 당선인이 지난 17일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시장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반영 건의 및 지역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역현안이 산적하고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 취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한편 최 당선인은 “민선 8기에는 도,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국무위원 허위 답변시 처벌 규정 마련

민주 윤준병 의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해 위증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해 윤준병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달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천주교 “조력 존엄사법 심각한 우려... 인간 존엄 실현 아냐”

천주교 측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의된 의사조력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발기 환자의 건지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며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 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생명위원회는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며 “정부가 발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뉴스